



21세기의 두려운 도전: 인구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방하남(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전 지구적 차원에서 20세기가 ‘가진 자(haves)’와 ‘가지지 못한 자(have nots)’, 인종과 인종, 종교와 종교 간의 갈등과 투쟁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이상의 대부분의 갈등요소들이 변형된 형태로 유지되면서 민족국가 차원에서 전혀 새로운 갈등요인이 하나 더 첨가되는데 그것은 연령세대간의 갈등, 즉 은퇴한 고령세대(the old)와 현역의 젊은 세대(the young) 간의 갈등이 될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주지하다시피 지속적인 평균 수명의 연장,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인구의 고령화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중심으로 수혜자인 은퇴세대와 부담자인 현역 근로세대 간의 정치사회적 긴장과 갈등이 시한폭탄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가까이 일본의 경우 이미 30여 년 전부터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됨으로써 초고령사회가 가지고 올 여러 측면의 경제·사회적 문제점들에 노출되어 있는 한편, 10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중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2030년경에는 중국도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된다는 사실은 미래학자들을 두렵게 하기에 충분한 뉴스거리이다. 한국의 경우도 일본과는 약 30년의 시차를 가지면서도 동일한 속도의 고령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Economist* 최근호(2004. 3.27)는 고령화와 은퇴에 관한 특집을 게재하면서 서두에 올해를 기점으로 전세계적으로 60세 이상의 인구가 5세 미만 유아 인구의 비율을 넘어서게 되었는데, 이것은 인류 역사상 초유의 일임과 동시에 향후 이러한 추세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자들은 21세기를 ‘은빛 세기(Silver Century)’로 명명하고 있다.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세대간 갈등의 조짐들은 이미 상대적으로 일찍 고령화된 인구와 오래된 사회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 유럽 선진국들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연금제도뿐만 아니라 의료보험과 장애보험제도 등이 심각한 재정 문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제도개혁과 비

용 부담을 둘러싸고 현역과 은퇴세대 간에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갈등구조 속에서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고령화사회는 고령자가 점점 더 다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후소득보장과 노후 의료보험에 관한 한 다수의 고령 투표권자가 행사하게 될 정치적 힘 혹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세력이 없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볼 때 그 대답은 간단하다.

인구의 고령화가 사회보장제도, 특히 연금제도와 의료보험제도에 가지는 재정적 차원의 함의는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자 대비 급여 수혜자가 늘고 그 수혜자들이 과거보다 더 오랜 기간 급여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적 문제를 배가하게 될 또 하나의 전세계적인 추세는 중고령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점점 더 일찍 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대표적인 선진국들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의 노동시장참여율이 1900년도에는 60% 이상이었던 것이 1세기 후인 2000년에는 20% 이하로 40%포인트 이상 하락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조만간 별다른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선진국들 중에서 동일한 고령사회인 일본의 경우는 65세 이상 인구의 거의 60% 정도가 아직도 노동시장에 참여하며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예외적이다. 이러한 예외적 현상은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의 경우 자영업 부분이 넓고 고령자의 대부분이 취업하고 있는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근로계층의 이러한 자발적 조기퇴직은 곧 바로 사회보장의 보험료 부담자의 풀(pool)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 사회보장제도가 오래되고 지출 규모가 큰 선진유럽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추세는 국가에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어서 향후 이러한 조기퇴직 추세를 뒤집기 위한 광범위한 제도개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 것인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불안정한 연금제도의 미래, 온갖 갈등의 요소를 안고 있는 의료보험제도 등 한국의 경우도 선진국들이 이미 겪었거나 겪고 있는 거의 모든 경제사회적 문제들이 21세기 길목의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뻔히 눈앞에 보이는 형국이다.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은 이제 막 고속 불균형 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와 성장과 분배의 균형 잡힌 틀을 미처 안정되게 갖추지도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엉겁결에 선진국형 인구구조와 사회보장의 재정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설치된 '고령화와 미래사회 특별위원회'가 이러한 과제에 대한 대비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